

# 중국 핵심이익 연구 소고(小考)

김홍규(성신여자대학교)

## 논문 요약

중국 ‘핵심이익’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중국 대외정책 실무분야에서 주장이라 할 수 있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 석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중국내 핵심이익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존재했다. 그러다 중국은 2011년 9월 6일 [중국의 평화발전]이라는 백서를 발간하면서 그간의 논쟁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는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안정, 국가통일, 중국 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 지속발전의 기본 보장이다.

중국의 공식적인 정의에 따르면 북한이나 한반도는 그 자체로는 중국의 핵심이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 대신 핵심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익지역에 속한다.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핵심이익의 존중과 보호”를 각종 국제관계에 있어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그간 중국의 핵심이익 논쟁을 놓고 평가하면, 핵심이익은 여전히 진화하는 개념이다. 국가중심적인 해석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외연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 “핵심이익”은 중국 시진핑 시기 10년 동안 중국 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될 것이며, 그 진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주제어 : 핵심이익, 시진핑, 중국 외교, 사활적 이익

## I. 도입글

### 1. 핵심이익 이슈의 부상

핵심이익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최고이익, 국가 및 민족의 생존존망과 관계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 인식되어 그 개념의 변화는 엄청난 파장을 수반할 수 있다.<sup>1)</sup> 중국은 국가이익을 대체로 핵심이익, 중요이익, 일반이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후자로 갈수록 가변적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의 내용과 적용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중국 외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핵심이익은 당연히 경제발전이라 여겨왔으나, 국력의 상승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핵심이익의 적용 범위가 변화되고 구체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핵심이익’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중국 대외정책 실무분야에서 주장이라 할 수 있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석상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부터이다. 중국은 그 이후 각종 고위급 외교행사에서 “핵심이익”의 존중이란 개념을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타국을 비난할 때도 “엄중하게 중국의 핵심이익을 손상”한다는 표현이 빈번해 지고 있다.<sup>2)</sup>

2009년 7월 다이빙궈는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은 “중국 당과 국가 기본체도의 유지, 국가안보와 영토 및 주권 보호,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발전”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회의기간 중 미국은 이에 대해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중국은 미국이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1) 懷成波, “怎樣理解國家核心利益?” 『紅旗文稿』 2011年 2期, p. 38.

2) 이에 대해서는 유동원, “21세기 중국 대외전략과 핵심이익 외교.”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20호), 2011, pp. 9~12.

것으로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2009년 11월에 북경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은 핵심이익을 상호 존중해주시기로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다.<sup>3)</sup> 중국 측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이 상호 핵심이익에 대해 존중하는 문제에 더 적극적이었고, 심지어는 내부 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한다. 미국은 이 당시만 해도 중국을 글로벌 파트너로서 인정하면서 세계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의 공동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긍정적 태도도 이러한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다이빙귀가 제시한 핵심이익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시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다.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막한 UN 기후 변화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의 비협조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경멸하면서 달라졌다. 미국은 중국이 주요이슈에서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역시 2010년 미국의 대만무기판매, 달라이라마 방미,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 등 사안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었다. 미중은 당시 상호 기(氣)싸움의 양태를 띠면서 반목하였지만, 당시로서는 이 핵심이익이라는 개념이 추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미중관계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못했다.

2010년 3월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주요 관리가 사석에서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에 속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하였다.<sup>4)</sup> 이후 미 국무

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그 관리가 다이빙귀였고,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남중국해가 들어가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문안에서는 ‘핵심이익’ 관련 내용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다.<sup>5)</sup> 이는 당시 미중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것이었다.<sup>6)</sup>

한국에서는 2010년 3월 한국의 서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태가 중국 ‘핵심이익’의 한반도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을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함 사태로 인한 미중 갈등과정에서 양이(楊毅)와 같은 중국 군부의 일부 장성은 중국의 핵심이익지역을 대외관계에 확장시켜 적용하려 시도하였다. 당시 국내 일부에서는 7월 14일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한반도 서해마저 중국의 “핵심이익” 영역에 포함시켰다고 해석하였다.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러한 중국 일부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7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사안”이라고 주장하여 ‘핵심이익’이 본격적으로 국제이슈화하였다.

시진핑을 위시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는 “핵심이익의 존중과 보호”를 각종 국제관계에 있어서 적극 내세우고 있다. 모든 국가관계(북중관계 포함)를 당대당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침을 고려할 때, “핵심이익”은 중국 시진핑 시기 10년 동안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회담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중 양국이 상호의 핵심

3) 원문 내용은 Respecting each other's core interests is extremely important to ensure steady progress in U.S.-China relations.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U.S.-China Joint Statement," November 17,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 (검색일: 2013. 9. 25); Stephanie Kleine-Ahlbrandt (contributor), "Does Promoting 'Core Interests' Do China More Harm than Good?" *ChinaFile Conversation*, May 2, 2013. <http://www.chinafile.com/does-promoting-core-interests-do-china-more-harm-good> (검색일: 2013. 9. 25).

4) Edward Wong, "Chinese Military Seeks to Extend Its Naval Power." *New York Times*, April 23, 2010. <http://www.nytimes.com/2010/04/24/world/asia/24navy.html?pagewanted=all> (검색일: 2013. 9. 25); Michael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www.kci.go.kr](http://www.kci.go.kr)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February 22, 2011, pp. 9, 23. <http://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article/67966> (검색일: 2013. 9. 25).

5) Michael Swaine, pp. 8~9. <http://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article/67966> (검색일: 2013. 9. 25).

6) 국내에서 미중간의 핵심이익 해석을 놓고 갈등하는 안건들을 정리한 글은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EAI US-China Relations Briefing*, No. 1, 2011. 5. 4.

이익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합의 한 상호 핵심이익 존중에 대한 합의는 아직 국내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결과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국무원 외사담당 국무위원 간의 대화채널 수립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향후 한중간 가장 중요한 전략적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 2. 국내적 논의

국내에서 중국 핵심이익의 한반도 적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글은 그리 많지는 않다. 국내에서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이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이후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동년 7월 14일자 브리핑에서 “한반도 서해에서의 군사훈련은 동지역 국가들에게 국가안보 위협을 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국내 일부 인사들은 이를 ‘한반도 서해 지역이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에 속한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sup>7)</sup> 그 원문을 참고해보면, 이러한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 상황에서) 한미의 군사행동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중국이 아닌 북한을 지칭할 수도 있는 맥락이 존재한다.<sup>8)</sup>

7) 예를 들면, <http://m2.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0054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4004.html> (검색일: 2013. 9. 25).

8) 이 발언은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716403.shtml](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716403.shtml) (검색일: 2013. 9. 25) 이하 원문을 보면(밑줄은 필자), 问: 最近有很多关于中国在黄海的核心利益的报道, 中国的核心利益具体包括什么? 美韩联合军演在哪些方面会损害中国的核心利益? 答: 中国的核心利益是指国家主权、安全、领土完整和发展利益。关于第二个问题, 我再次重申, 我们希望在当前的形势下, 各方能够通过安理会通过主席声明为契机, 推动对话与谈判。朝鲜半岛问题只有通过对话与谈判的和平方式才能得到解决, 打口水仗甚至采取军事手段, 不能从根本上解决问题。我们呼吁有关各方多做缓和而不是加剧地区紧张局势的事情, 维护而不是损害本地区有关国家安全利益的事情, 共同努力, 从根本上推动对话与谈判, 维护半岛和平与稳定, 实现半岛无核化以及东北亚的长治久安。

『SERI 한반도 정세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중국 핵심이익의 한반도 적용과 관련하여 다소 과감한 주장을 제기하였다.<sup>9)</sup>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동년 7월을 전후해 북한을 전략적 ‘핵심이익’으로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다.<sup>10)</sup>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5월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장관 방중이후 중국은 ‘핵심이익’을 새로이 규정하여, 기존의 핵심이익 범위를 확장하여 7월부터는 남중국해 문제 등도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sup>11)</sup> 동시에 대북 정책 역시 조정을 단행해 한반도도 핵심이익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중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입증할 자료나 인터뷰 등의 내용은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신 그 정황적인 근거로 연변대 진쌍하이(金香海) 교수의 글을 언급하였다.<sup>12)</sup> 그리고 정황적인 증거로 북중간의 혈맹을 강조한 귀보슈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방북시 발언 내용,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2010년 10월 25일 ‘항미원조전쟁’ 60주년 기념식에서 한 발언을 예로 들고 있다.

그 밖에 국내적으로 국방연구원의 이상국 박사는 중국의 전략적 개념이 확장되면서 한반도 역시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에 속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부산대 차창훈 교수는 2008년 이후 중국의 적극적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핵심이익 지역이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해상이익의 확보차원에서 황해(서해) 역시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13)</sup>

9) SERI, 『SERI 한반도 정세보고서』, SERI, 2012년 2/4분기.

10)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이미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이라는 관점은 김태현, “탈냉전기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외교: 개념, 전략 및 특징.” 『아태연구』 제17권 제2호, 2010, pp. 83~102 참조.

11) 그 근거로는 중국외교부의 2009년 7월 14일자 외교부 대변인 친강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중국 측에서 내용을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인용된 것인지 평가하기 어려움. 기자회견 내용은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572909.shtml](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572909.shtml) (검색일: 2013. 9. 25).

12)金香海, “中國的崛起與朝鮮半島關係.” 『東北亞論壇』, 第2期, 2012, pp. 57~63.

13) 이는 2012년 5월 중국외교안보독회에서 이상국 박사의 발언 그리고 이상국 외, 『미중 소프트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서울: 국방연구원, 2012 참조. 차창훈의 주장은 “신형대국관계와 핵심이익.” 『국민일보』 2013. 9. 1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562438&cp=nv> (검색일: 2013. 9. 25).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연구원 이창형 박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관점과는 달리 북한 핵심이익 연관론을 전개하는 데, 그것은 북한 핵보유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sup>14)</sup> 그 근거로는 북핵 보유가 초래할 부정적인 여파로,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가속, 한미 및 미일 동맹의 결속강화, 중국 동북지역이 직접적으로 북핵 위협에 노출, 중국 국내여론의 분열로 인한 정치 혼란과 지도부 정당성 위협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심증적으로 혹은 기존의 북중 관계에 대한 인식에 따라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 정황적인 증거를 넘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측 역시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이익 개념에 대한 논리적 분석, 중국내의 관련 논쟁과 그 개념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반도 문제 및 우리에게 미치는 함의를 생각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II. 중국 핵심이익 개념의 연원

### 1. 핵심이익의 연원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의 국가이익 개념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이데올로기적인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결합한 모호한 형태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며, 종종 대외정책의 분석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국제주의적 해석이 국가 중심의 이익개념보다 상위에 위치하였다.<sup>15)</sup>

중국이 국제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넘어 보다 진지하게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고민한 것은 중소 영토분쟁이 격화된 1969년 이후이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중국의 학술계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개혁개방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였다.

중국이 핵심이익 개념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한 어법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이 기존에 사용한 어법들은 “절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등의 표현들을 통해 타협할 수 없는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는 하였지만,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개념화를 시도한 것은 개혁개방 이후 서구적인 개념에 익숙해지면서 부터이다.<sup>16)</sup>

중국내 학술 자료 주요 검색엔진인 CNKI를 통해 추적해보면 학술지 차원에서 “국가핵심이익”이란 개념은 상해 사회과학원 루린이 1990년 “국제 상호 의존과 충돌”에 대한 논문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sup>17)</sup> 그에 따르면 “국가이익이란 핵심이익과 일반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국가의 독립, 주권, 영토보전을 포함하고, 후자의 내용은 너무 다양해서 --- 일정시기에 일반이익은 잠시 핵심이익으로 전환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학술계에서 ‘국가이익’이나 ‘국가 핵심이익’과 같은 개념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이후이다. 당시 탕융성, 류징포, 장즈쥙, 스인홍 등의 글이 나왔고,<sup>18)</sup> 1997년 엔체통은 『중국 국가이익분석』이란 저서를 출판하였다.<sup>19)</sup> 국방대학 탕융성 등은 국가이익을 경제이익, 정치이익, 안보이익으로 분류하고, 이 중 시대에 따라 주도적 작용을 하는 것이 핵심이익이라 규정하였다. 탕에 의하면 건국이후에는 안보이익이 핵심이익

의 변천에 대해서는 劉宗義, “中國共產黨國家利益觀的發展演變,” 『國際展望』 第4期, 2011.

16) Ibid, p. 20.

17) 盧林, “論國際相互依存與相互衝突,” 『上海社會科學院 學術季刊』 第3期, 1990, p. 8.

18) 唐永勝·劉靜波·張志忠, “國家利益的分析和實現,” 『戰略與管理』 6期, 1996; 時股弘, “美國對華政策的基本國內背景,” 『戰略與管理』 6期, 1996.

19)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14) 이창형, “북핵과 중국의 핵심이익,” 『동북아안보정책분석』, 국방연구원, 2013.

15) 이는 장뉘성과 왕이저우의 지적임. 『世界知識』 No. 19, 2011, p. 18. 그리고 공산당의 국가이익관

이었고,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경제이익이 핵심이익으로 부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제건설,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영토 및 영해의 보전이라는 삼자 관계의 적절한 처리를 강조하였다. 인민대학 스인홍은 독립, 안보, 국가통일 및 영토보전, 사회와 정치기초 안정을 핵심이익으로 지목하였다. 청화대학 옌쉐통은 기존의 경제, 정치, 안보 이익이외에 문화이익을 추가하였다. 핵심이익으로는 전체국민의 생명안전,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경제 독립, 정치체도의 수호 등을 들고 있다.

리샤오시, 쉰우공빈 등은 1997년 국가이익이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최고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이익은 국가이익의 물질적 기초이고, 정치이익은 경제이익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안보이익은 정치이익의 연장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1970년대 말 이후 경제이익이 중국의 핵심이익이 되었다고 지적하여 앞에 소개한 탕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에, 쉰핑평은 국가주권, 영토보전, 군사적 안보를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sup>20)</sup>

그 후 양안관계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대만문제를 주로 지적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니우권은 1998년 쓴 미중관계 관련 글에서 대만 및 티벳을 국가핵심이익으로 규정하였고,<sup>21)</sup> 후융하오는 1999년 미중관계 관련 글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을 대만문제에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sup>22)</sup> 21세기에 들어서서야 중국학자들은 국가핵심이익의 대상으로 주권 및 영토 보전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가이익의 상대적 중요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졌다. 옌쉐통은 국가이익은 민족의 생존,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 세계에 공헌이라는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상대적인 중요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sup>23)</sup>

20) 熊明峰, “論軍事安全與經濟安全的關係,” 『歐洲』 第6期, 1997.

21) 牛軍, “疑慮: 評釋中國人對中美官係的戰略思考,” 『太平洋學報』 第4期, 1998.

22) 胡泳浩, “交流, 合作, 協調及國家利益,” 『國際觀察』 第6期, 1999. 그리고 이러한 류의 분석은 『世界知識』 No. 19, 2011, p. 19.

23) 『世界知識』 No. 19, 2011, p. 19.

## 2. 미국의 ‘핵심이익’ 개념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은 실제 미국으로부터 배워왔다는 것이 중국학자들의 대체적인 전언이다.<sup>24)</sup> 실제 중국의 국가이익 및 핵심이익 연구에서 교과서적인 책을 출판한 바 있는 옌쉐통 역시 미국 유학과 출신으로 미국식 국제정치 분석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이익 개념의 분류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이익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다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미국의 사활적인 국가이익과 등치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데, 이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00년 들어 국가이익을 ‘국가이익위원회’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국가이익을 규정하였다. 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이익은 사활적(vital) 이익, 극단적으로 중요한 (extremely important) 이익, 중요한 (important) 이익, 부차적으로 중요한 (less important or secondary important) 이익으로 구분하고 있다.<sup>25)</sup>

사활적(vital) 이익은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고 고양하기 위하여 엄밀히 필요한 조건을 의미하였다. 극단적으로 중요한 (extremely important) 이익은 만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고 고양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을 완전히 훼손하지는 않으나 심각히 왜곡시킬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중요한 (important) 이익은 만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자유롭고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고 고양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부차적으로 중요한 (less important or secondary important) 이익은 자유롭고

24) 필자의 다양한 인터뷰에 근거함. 주15) 참조.

25)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amernatinter.pdf> (검색일: 2013. 9. 25); [https://dnpnpro.outer.jhuapl.edu/media/RethinkingSeminars/021810/Allison\\_ppt.pdf](https://dnpnpro.outer.jhuapl.edu/media/RethinkingSeminars/021810/Allison_ppt.pdf) (검색일: 2013. 9. 25).

안전한 국가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고 고양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중요하고 바람직한 조건을 의미한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대체로 핵심이익, 중요이익, 일반이익 삼분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의 장퇴성은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은 미국의 사활적 이익 개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sup>26)</sup> 그리고 중요이익은 미국의 극단적으로 중요한 (extremely important) 이익에 부합하며, 나머지는 일반이익에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해석의 진화를 분석해 보면, 미국의 사활적 이익과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사활적 이익개념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고, 적용대상도 광범위하다.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으며, 더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대응책도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은 여전히 진화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이익 개념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미국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가이익 특히 핵심이익을 해석하면 양자 간 괴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 그 괴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III. 중국내 핵심이익 논쟁

중국 핵심이익 관련 논쟁에는 크게 ‘핵심이익 확대론’, ‘보수적 핵심이익론’, ‘절충론’이 존재한다. 확대론은 중국의 부상에 고무된 일부 강대국론자들과 군부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고, 전통적 지정학론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있다 (전통적 지정학과 및 일부 부상하는 강대국 외교론자). 보수주의자는 주로

관방의 입장이거나 관방과 가까운 학자들(발전도상국 외교론자)이다. 강대국론자의 다른 일부는 핵심이익 논쟁의 연기 혹은 불용을 주장하고 있다.<sup>27)</sup>

#### 1. 핵심이익 확대론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당시 주류이론인 발전도상국론에 방점이 가 있던 중국 외교부는 온건하고 신중한 대응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한국의 서해에 들어와 한미군사훈련을 할 계획이 알려진 이후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동원한 전통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강경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군부가 그 대표적인 세력중 하나였다. 당시 중국 군부측은 한·중간 경계수역인 서해(황해)를 핵심이익 영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의 양이(楊毅) 해군소장은 미 해군이 서해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 ‘국익’에 대한 도전이자 중국인민들에 모욕을 주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은 중국 동해(상하이와 저장성 앞바다)의 해역에서 2010년 6월 30일~7월 5일 동안 합동 군사훈련을 단행하였다. 실탄사격 훈련 마지막 날인 7월 5일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는 “미국 항공모함이 황해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했다. 결국 중국 외교부 역시 비록 서해를 핵심이익지역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sup>28)</sup> 여론을 등에 업은 군부의 입장에 밀려 미 항모의 서해진입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로 전환하였다(2012년 7월 14일자 외교부 대변인 발언).

중국의 환구시보는 2010년 7월 9일 사설에서 “황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의 핵심지역으로 수탉의 인후부(목구멍)와 같이 국가의 생사존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환구시보는 한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 항공

26) 『世界知识』 No. 19, 2011, p. 17.

27) 전통적 지정학과, 발전도상국론, 강대국 외교론에 대한 설명은 아래 <표 1> 참조.

28)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남해를 핵심이익지역으로 공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모함은 자체 무기만으로도 중국 연해의 어떤 지방도 타격할 수 있다”며 “만약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한다면 이는 ‘함포외교’의 현대판 버전으로 중국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샤오텐 부총참모장은 홍콩의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중국과 인접한 황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데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동 시기 봉황TV의 스킵핑(石齊平) 역시 남해를 중국의 핵심이익지역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sup>29)</sup>

또 다른 예로 환구시보는 중국의 칭화대학 리씨광(李希光) 교수의 글, “한반도(특히 북한)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북한에 어떠한 정권 어떠한 제도가 들어서도 북한은 중국의 일급 핵심이익에 속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C자형 포위국면에 처해 있고, 파키스탄, 네팔, 북한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포위망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북 3성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안정과 유지는 필수적이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는 논지였다.<sup>30)</sup>

중국 인민대 쉬엔여우청(玄有成) 교수 역시 중국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핵심이익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강한 국가와 민족발전, 국가주권과 영토, 영해의 보호, 국제무대에서의 주도적인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31)</sup> 청용넨 교수 역시 연합국의 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저지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sup>32)</sup>

## 2. 보수적 핵심이익론

2010년 이후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중국 위협론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0년

7월 13일 외교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다이빙귀가 제시한 핵심이익의 내용 중 당의 집정능력 부분을 생략하고, 중국의 핵심이익을 국가주권, 안전, 영토보전 및 발전이익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의 국제화를 회피하고 양자 간의 문제로 국한하고자 시도하였으며(제3자의 개입은 반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할 국제적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평화적 부상’론의 입안자이자 후진타오시기 대외정책을 입안하는 데 주요한 조력자로 알려진 정뽈젠(鄭必堅)은 미중간 중국의 핵심문제 확대를 놓고 알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2차 5개년 규획과 관련한 건의’에서 보수적인 핵심이익론의 종지(宗旨)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2020년까지 전략적 기회의 시기로 규정한 바 있다. 국력의 증대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역할도 증대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핵심이익’을 강조하고 갈등하기보다는 ‘공동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구소련의 꿈’을 꾸어서는 안 되며, ‘중국의 꿈’을 꾸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33)</sup>

북경대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왕지쓰 교수 역시 한반도 문제 관련 내부토론에서 중국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심이익은 대만, 신장, 티벳 등이며, 북한 및 북핵문제는 중국 외교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중심적인 위상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기관지인 『세계지식(世界知識)』도 핵심이익에 관한 특집호에서 대외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감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sup>34)</sup>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미국연구소 소장이었던 웬핑, 북경대 주평 교수 등도 보수적인 핵심이익론자로 평가할 수 있다.

## 3. 핵심이익 불용/연기론

29) 石齊平. “什麼是核心利益.” 『中外管理』 第 8 期, 2010, p. 14.

30)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環球時報』 11 月 30 日, 2010.

31) 玄有成. “中國和平崛起的核心利益思考.” 『金融經濟』 8 期, 2006.

32) 鄭永年. “聯合國改革觸動中國核心利益.” 『21 世紀經濟報道』 6 月 20 日, 2005.

33) [http://big5.qsttheory.cn/zz/yjzy/201106/t20110614\\_86948.htm](http://big5.qsttheory.cn/zz/yjzy/201106/t20110614_86948.htm)(검색일: 2019. 10. 2).

34) 『世界知識』 No. 19, 2011, p. 21.

국방대 교수 한쉐동(韓旭東)은 핵심이익개념을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중국이 핵심이익을 주장하면 첫째, 국가 간 충돌을 야기할 개연성이 지나치게 크고, 둘째, 중국의 국력이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셋째, 모든 외교사무가 이에 집중되는 것 같은 허상을 안겨줄 것이라 하였다.<sup>35)</sup>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조리였던 따웨이(達巍)(2013년 현재는 미국연구소 소장) 역시 핵심이익의 확대해석이 현 중국의 안보상황에서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양미엔(陽晁) 역시 중국 외교부의 저널인 『세계지식』에서 서방정치학이론으로 ‘국가 핵심이익’을 해석 한다면, 여론의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자승자박의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였다.<sup>36)</sup>

## IV. 중국의 공식입장

### 1. 개념의 진화

중국 관방에서 ‘핵심이익’ 개념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시한 인물은 중국 외교부장 탕자첸이다. 탕은 2003년 1월 19일 반테러문제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여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회견하면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며, 이 문제를 타협하여 잘 처리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증하는 관건이다”라고 발언하였다.<sup>37)</sup> 그 후 탕은 파월이 중국을 답방하였을 때, 2월 24일 동일한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sup>38)</sup> 중국 외교부장 리자오쑹 역시 2004년 12월 15일 인민일보와의 연말 간담회에서 “국제무대

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을 좌절시키는 것이 중국의 핵심이익과 민족 존엄을 세우는 것”이라 언급하였다.<sup>39)</sup> 이는 중국 외교당국 내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논의가 이미 존재하였음을 의미하며, 당시는 주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006년에 가서야 비로소 신장 및 티벳이 ‘핵심이익’의 범주로 명백히 언급되기 시작하였다.<sup>40)</sup>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웬핑은 2005년 8월 3일 인민일보의 사설을 통해 미중간 전략대화기제 수립이 “각자의 ‘핵심이익과 국제적 책임을 진솔하게 논하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41)</sup> 그러나 중국이 대외적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개념을 분명히 설정한 것은 2009년 7월 다이빙귀가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을 언급하면서 부터이다. 그 내용은 중국 당과 국가 기본제도의 유지, 국가안보, 영토 및 주권 보호,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발전이라고 제시되었다.

2010년 3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다이빙귀는 비록 사석에서의 언급이기는 했지만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 개념에 남중국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미국 측은 이를 남중국해 관련 사안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이 보다 공세적인 전환의 신호로 해석하였다.<sup>42)</sup>

중국은 대외정책이 공세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외부의 비판에 대한 답으로서 다이빙귀는 2010년 12월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고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핵심이익을 기존의 언급에서 좀 더 구체화하여 다음 세 범주로서 정의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자면 첫째, 중국의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35) 『瞭望』 2010年 第30期, 韓旭東의 글; 安慧林, 『理論與當代』 第 9期, 2010年, p. 55.

36) 『世界知識』 No. 1, 2011, p. 5.

37) 『人民日報』 2003年 1月 21日.

38) 『人民日報』 2003年 2月 25日.

39) 『人民日報』 2004年 12月 15日.

40) Caitlin Cambell, Ethan Meick, and Craig Murray, "China'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er*, May 10, 2013, p. 3.

41) 『人民日報』 2005年 8月 3日.

42) Ronald O'Rourke,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9, 2013, pp. 72~73. <http://www.fas.org/sgp/crs/row/R42784.pdf> (검색일: 2011. 10. 08);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4:7 (Spring 2013), pp. 17~18.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둘째, 중국의 주권유지, 영토안보확보, 국가통일, 셋째,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sup>43)</sup>을 들고 있다.

다이빙귀의 주장은 본래 2010년 10월 중공당 제17기 5중전회 보고서 및 제12차 5개년 계획(規劃)(2011~2015년)의 기본노선 내용을 담은 보고서 내용이였다. 중국 외교의 실무수장인 다이빙귀는 12·5규획에 대한 자신의 견의문인 ‘평화적 발전노선을 견지하자’는 제목의 글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하였다. 다이빙귀는 중국의 핵심이익 확대를 주장하는 내부세력 및 공세적인 외교를 우려하는 외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중국은 기존의 평화 발전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였다. 이의 근거로 “중국은 아직 세계와의 조화를 통해 평화적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강조(발전도상국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이의 주장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으로써 국내의 핵심이익 확대론자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sup>44)</sup>

중국은 2010년 말까지 중국의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전략사고들 간에 타협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에서 핵심이익의 대상을 남중국해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미국의 개입여지를 낚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형성하였다. 당시 중국의 주류 사고였던 “발전도상국론”자들은 핵심이익 논란의 억제 및 지역분쟁의 국지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중국 대외이미지의 추가적인 악화방지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중국해가 핵심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능한 직접적인 거명을 자제하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상태로 봐 두려하였다. 세 번째, 남중국해는 핵심이익지역이기는 하나 ‘분쟁중인’

핵심이익지역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대만 및 신장문제 등과는 구분하였다. 그리고 대응 방식도 협상과 평화적 방식과 같이 다른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sup>45)</sup> 이는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이 무력적인 수단을 전제한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과는 일정정도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 외교부의 기관지인 『세계지식』은 핵심이익관련 특집호에서 ‘분쟁 중인’ 핵심이익을 넘어 일반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방식에서도 반드시 무력적인 방식만이 아닌 정치, 경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력사용은 최종적이고 비정상적인 수단으로만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6)</sup>

2011년 8월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은 미국 부통령 바이든의 방중시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상호간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단, 그 내용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은 발전이익, 대만 및 신장 문제를 존중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언급하였다.<sup>47)</sup>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시진핑이 언급한 중국의 핵심이익 내용은 그간 전개된 중국내부의 핵심이익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발전이익’은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개념이며 동시에 주변 환경의 안정과 평화를 더 강조하는 개념이라는 인식이었다.<sup>48)</sup>

2011년 9월 6일 중국은 『중국의 평화발전』이라는 백서를 발간하면서 그간의 핵심이익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 6가지로 정의하였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안정, 국가통일, 중국 정치체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 경제사회 지속발전의 기본 보장<sup>49)</sup>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이 2011년

43) <http://app.rmlt.com.cn/print.php?contentid=12276> p. 6 (검색일: 2011. 10. 08).

44)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85980&sid=E&tid=3> (검색일: 2011. 10. 08). 다이빙귀의 정리는 2010년 7월 13일 진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45) 『世界知識』 No. 19, 2011, p. 20.

46) 『世界知識』 No. 19, 2011, pp. 20~21.

47) 懷成波, p. 38.

48) 潘慰娟, “中美核心國家利益之比較,” 『國際資料信息』 第9期, 2006, p. 10.

49) 『世界知識』 No. 19, 2011, p. 15.

정의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식되는 듯 했다. 그러나 중일 갈등이 악화되는 와중에 일본 매체들은 2013년 4월 26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다오위(센카쿠)열도가 중국의 핵심이익 영역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고 보도<sup>50)</sup>하여 중국의 핵심이익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중국어 번역문은 이를 “핵심이익과 연관되어 있는(touched on core interests)” 사안으로 언급하여,<sup>51)</sup> 일본 측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3년 6월 시진핑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시 다오위(센카쿠)열도가 중국의 핵심이익 영역에 속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도되어<sup>52)</sup> 중국의 핵심이익 정의와 관련한 논란을 이어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핵심이익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중이고 진화중이라는 점이다.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희토류, 자원손실 방지, 제해권의 수호 및 황해, 남해, 동해 등도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53)</sup> 여러 정황을 놓고 판단할 때,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들은 향후 여러 변화하는 상황과 조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중국 내 핵심이익과 관련한 논쟁의 추이로 볼 때, “핵심이익 불용론”은 점차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2010-11년 당시 주류였던 “보수적인 핵심이익론”에서 탈피하여 시진핑 시기들어 점차 점진적인 추세로 “핵심이익 확대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평가된다.

## 2. 시진핑 시기 외교와 핵심이익

50) Kyodo (Tokyo), “China Says Senkaku Islands are its ‘Core Interest.’” April 26, 2013; *Yoimuri Shimbun* (Tokyo), “Editorial: China’s ‘core interests’ comment over Senkaku Islands uncalled for.” April 29, 2013.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0173671> (검색일: 2011. 10. 08).

51) Caitlin Cambell, Ethan Meick and Craig Murray, *China’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er, May 10, 2013, p. 5.

52) 『연합뉴스』, 2013년 6월 12일.

53) 『世界知識』 No. 19, 2011, p. 21.

시진핑 시대 외교의 새로운 전략 개념속에 “새로운 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핵심적인 화두어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익’의 존중과 지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시진핑 시기 외교는 후진타오 시기 발전도상국이라는 자아정체성에서 벗어나 점차 강대국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대 세계, 지역, 한반도 전략을 재구성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인식은 리커창 총리가 2013년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에서 중국을 발전중인 강대국이라고 규정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이는 과거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인식하던 규정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sup>54)</sup>

중국의 핵심이익의 존중과 지지 요구는 중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면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권익을 수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강대국관계”의 내용을 보자면, 주 대상은 미국이며, 점차 다른 강대국관계에도 확대적용이 예상된다. 이 개념은 이미 러시아 및 인도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것으로 천명되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우선, 중미 양자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이 부상한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는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며, 국제 질서 안에서 비군사적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경쟁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상호간의 핵심이익 혹은 특별히 중시하는 사안은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마치 중미관계의 마지노선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화답하였다.<sup>55)</sup>

중국 시진핑 시기 주변안보 환경 인식을 보자면, 중국의 핵심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전 요인이 증대하고 있다는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선,

54)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 정책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2013년 4월 26일, p. 3.

55)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대중태도에 대해 미국 워싱턴의 중국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미 부시 집권기에 수립한 대중 정책을 계승해, 중국과의 대립을 위주로 한 정책에서는 분명 탈피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복귀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둘째, 향후 10년간 영토와 영해, 경제수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주변지역에서 중대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 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에 핵무기가 확산되고,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향후, 북한, 미얀마, 파키스탄, 중동지역 등에서 돌발사태 발생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동아시아 내 다자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은 후진타오 말기에는 공세적이랄까 보다는 다소 수세적이면서 위기관리를 위주로 하는 듯 했다. 여러 주변 상황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직접적인 침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대응 방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균형전략'을 추구할 것을 천명하였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역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제이익을 인정하고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중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한편, 미국이 중국의 '평화발전(和平發展)'을 인정하도록 하는 전략목표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공존, 공영, 공생하는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주변국과의 권익분쟁에 대해서는 무력이나 일방주의에 의존하기보다는 "우호적인 양자 간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단, 제3국의 개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주변국의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위기관리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북한에 대해 위기관리 체제를 수립하도록 권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성숙한 민주국가(일본)'에서 정국의 급변이 일어날 경우 그 변화의 충격이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과도기형 국가(한국)'에서 정국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대중국 정책에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문제국가(북한)'에서 정국혼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혼란이 중국의 지정학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자주의의 강화추세에 대응해 아시아 다자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주요한 제도형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아시아화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다만 시진핑 시기 들어 이러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24-25일 중국의 주변국 외교 좌담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 외교의 대강은 후진타오 시절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새로운 외교적 도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선제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sup>56)</sup>

전반적인 여건을 놓고 볼 때, 중국은 당분간 핵심이익 개념의 확대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 대회에서 밝힌 중국의 해양강국화 시도, 해양권의 적극 옹호, 그리고 중국의 반접근저지 전략(A2/AD)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핵심이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화중인 것으로 평가된다.

수세와 공세가 교차하고 있는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의 변화는 중국의 현 종합국력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개념은 시대의 상황과 조건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여지를 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핵심이익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과 같은 개념은 여전히 많은 모호성을 지니고 있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대단히 공세적인 외교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향후 중국의 에너지 자원의 획득 및 해상수송로의 확보 문제 등과 같은 사안이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하였을 때, 그 파장은 대단히 클 것이다.

56) 최근 이를 상징하는 개념이 주동작위(主動作爲)이다.

## V. 한반도에 대한 합의

### 1. 미중관계와 한반도

미중간의 갈등과 협력은 양국이 사활적 혹은 핵심적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영역, 혹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익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부가 중요하다. 미국의 국가이익 개념에서 한국을 평가하자면 한미동맹은 미국의 “Lynch Pin”이라 할 정도로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익이 걸린 (중대이익)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이익 관계는 시대와 상황의 영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럴 것이라는 점이다.

2011년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안정이 미중의 공동이익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2013년 6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미중은 향후 한반도 문제는 양국의 사활적 혹은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으로 인식한 바, 상호 협의와 조정, 타협, 합의에 의해 처리하기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sup>57)</sup> 이는 미국의 사활적 혹은 중국의 전략적으로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상황의 현상 변경은 일방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의 입장에서 보면, 탈냉전시기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하락되었다. 이제 한반도 문제가 미중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결국 미중 모두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 및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이나 북한을 최소한의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조되며, 동 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민감도가 크게 제고된다. 미중 양국은 북한이나 한국이 문제를 야기하여 미중관계의 변수가 되는 상황은 방지하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과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북핵 및 한반도 문제가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마치 리트머스 테스트 지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강대국 관계”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배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은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주변국 외교를 중시할 것이다. 그 중 가장 주요한 대상은 첫째 동남아일 것이고, 다음으로는 한국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지향하는 중국에게 있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향후 미중관계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역내 안정을 해치면서 미중 관계를 곤혹스러운 갈등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경우, 미중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를 각자의 사활적 혹은 핵심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미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북한정권의 변화 혹은 한반도 통일에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할 개연성도 논리적으로는 존재한다.

### 2. 중국 핵심이익 논의의 한반도 적용

한반도나 북한이 중국 측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 지에 대해서는 중국 내 다양한 전략사고들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다 (<표 1>참조). 즉, 어떤 그룹과 만나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7) 사안에 따른 미중간의 이익관계를 정리한 글로는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EAI US-China Relations Briefing NO. 1, 2011.

<표 1> 중국내 전략사고의 분화와 정책정향

	전통적 지정학론	발전도상국론	신흥강대국론
국제적 지위인식	(전통) 강대국	발전도상국	신흥강대국
미국과 관계	경쟁	협력	전제적 편여(해정)
중국의 동북아 위상	전통 강국	지역 강국	세계적 강국
일본과 관계	적대적	협력 → 전제 및 대립	대응 → 포용 대상
한반도 정책	영향력 회복	현상유지	현상유지 원칙, 변화 가능성도 내포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	핵심이익	북한은 전략적 중대이익	한반도는 전략적 중대이익
대 한국 정책정향	비우호적	외교적 견인의 대상	해정과 유연성: 적극 포용 혹은 배제
북한에 대한 인식	전통우방, 전략적 자산	문제아	전략적 자산이자 부담의 이중성 인식
대북 정책수단	정치적 지원과 경제원조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설득	압력을 포함한 복합적 수단
급변사태 대응	군사적 개입	신중함 속 한미와 양자적 해결 모색	다자주의 선호, 기회주의적
대표 개념	순망치한(唇亡齒寒, 완충지대), 돌출뿔인(咄咄逼人)	도광양희(韬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대유작위(大有作爲)

출처 : Heungkyu Kim,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의 Table 1을 기초로 추가적 내용 포함.

중국의 기존 한반도 전문가들 및 군부 인사들이 주 담지자인 전통적 지정학론자들은 한반도를 중국의 완충지대이자 영향권 영역이라 간주한다. 이들은 북한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핵심이익 지역이라 보는 정향이 강하다. 단, 이들의 입장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주류 전략사고인 발전도상국론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익지역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북한의 전략적 지위는 대만과 같은

핵심이익 지역과는 차별화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시진핑 시기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신흥강대국론은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체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익 지역으로 간주하는 사고가 증가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함의를 지니는 바, 한반도 통일로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북한에서 한반도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상대적으로 낙관적 생각이 더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정의에 따르면 북한이나 한반도는 그 자체로는 핵심이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sup>58)</sup> 2009년 다이빙귀 국무위원이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제시한 중국의 3대 핵심이익 개념이나, 2011년 9월 6일 『중국의 평화발전』 백서에서 정리된 6가지 핵심이익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중국식 공식적인 개념을 놓고 해석해 볼 때, 북한이나 한반도는 핵심이익과는 차별화되는 중요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주변부에 대해 종종 언급하는 핵심이익과 관련된 공간 혹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익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59)</sup>

북한 문제가 중국의 핵심이익문제와 연관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우선, 북한 급변시, 미국(혹은 한미연합군)이 중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군사적으로 진주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북한 상실(Who lost North Korea?)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미중관계 악화시,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네 번째, 북한 급변사태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의 혼란과 불안정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58) 이러한 입장은 중국 북경대 교수 자칭귀의 인터뷰 <http://onbao.com/news.php?mode=view&num=38513> (검색일: 2013. 9. 25).

59) 중국 외교부 부부장 청귀평은 2012년 6월 7일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장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국내보도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조차 핵심이익지역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핵심이익”과 “핵심이익과 관련된”은 구분이 필요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rioo&logNo=90145050435> (검색일: 2013. 9. 25).

북한은 전략적으로 중요이익 지역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북한의 존재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도 존재한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지경(地經)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존재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북핵 위기가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 북핵 위기가 한미 및 미일 동맹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중국이 미일한과 군사적 분쟁에 연루될 개연성이다. 네 번째, 북한이 안정적 미중관계에 중요한 장애가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이다. 다섯 번째, 북한발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동북지역 경제 및 사회 안정 및 발전을 저해할 개연성이다. 여섯 번째, 북한의 독자적 외교군사노선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북핵 기술과 물질이 중국내 분리·독립주의자에게 확산될 개연성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연이은 무력 도발로 말미암아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측면보다는 전략적 비용을 크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요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 북한의 전략적 지위문제와 관련하여 전략과와 전통과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 3. 시진핑 시기 대한반도 정책

최근 북중 간의 변화는 당분간 근본적인 변화를 상정한 전략적인 변화보다는 전술적인 변화로 보는 편이 타당하나 “현상변경 마이너스” 정책 정도의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당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강대국인 중국의 전략적 중요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의 핵심이익에도 손상을 가져올 개연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새로이 들어 선 시진핑 체제는 이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대해 명확히 전하고 있다. 기존의 3不(不

戰, 不亂, 不統) 1無(비핵화) 정책에서 현재, 비핵화, 안정과 평화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대한반도 정책 3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sup>60)</sup> 중국 내부적으로는 대한반도 4원칙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원칙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외교의 DNA 변화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가속되고 있다. 미중 관계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동한다. 세력전이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북한문제의 온존 및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 강화에 따른 한중협력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단, 중국의 북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바꿀만한 구조적 변화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한중간 정치적 불신, 한미동맹문제, 대만문제의 존속,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가능성 등이 온존하고 있어,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전략적 유용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향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하여 다루려 할 것이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호히 요구하면서도 여전히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포용하려는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평가된다. 시진핑의 북한 비핵화 정책과 의지는 분명하나, 이는 한중관계, 미중관계, 북한의 대응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강공 위주의 전략으로만 나갈 경우, 상당한 역풍 및 국제적 고립이 예상된다. 시진핑 시기 신흥 강대국론자들이 주류로 부상하고, 핵심이익론이 중국대외정책의 주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한국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의 국익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과거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응할 개연

60) 중국이 비핵화라 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흔히 의미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합의문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주 내용이 북한 비핵화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고, 시 주석 역시 박대통령과의 공동합의문 설명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로 언급하였다.

성이 더 증대된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개념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더욱 분명해 졌고, 대북정책의 변화가능성도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의 기초는 여전히 현상유지를 선호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변경이 중국의 핵심이익에 손상을 가져 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안정적 관리, 그리고 대미 억지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懷成波. “怎樣理解國家核心利益?” 『紅旗文稿』 第2期, 2011.
- 金香海. “中國的崛起與朝鮮半島關係.” 『東北亞論壇』 第2期, 2012.
- 潘慧娟. “中美核心國家利益之比較.” 『國際資料信息』 第9期, 2006.
- 劉宗義. “中國共產黨國家利益觀的發展演變.” 『國際展望』 第4期, 2011.
- 盧林. “論國際相互依存與相互衝突.” 『上海社會科學院 學術季刊』 第3期, 1990.
- 唐永勝, 劉靜波, 張志忠. “國家利益的分析與實現.” 『戰略與管理』 第6期, 1996.
- 時殷弘. “美國對華政策的基本國內背景.” 『戰略與管理』 第6期, 1996.
- 閻學通. 『中國國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97.
- 熊明峰. “論軍事安全與經濟安全的關係.” 『歐洲』 第6期, 1997.
- 牛軍. “疑慮:評釋中國人對中美官係的戰略思考.” 『太平洋學報』 第4期, 1998.
- 胡泳浩. “交流, 合作, 協調及國家利益.” 『國際觀察』 第6期, 1999.
- 石齊平. “什麼是核心利益.” 『中外管理』 第8期, 2010.
- 李希光. “朝鮮是中國一級核心利益.” 『環球時報』 11月 30日, 2010.
- 玄有成. “中國和平崛起的核心利益思考.” 『金融經濟』 第8期, 2006.
- 鄭永年. “聯合國改革觸動中國核心利益.” 『21世紀經濟報道』 6月 20日, 2005.

『世界知識』 No. 19, 2011.

『人民日報』 2003年 2月 25日.

『人民日報』 2004年 12月 15日.

『人民日報』 2005年 8月 3日.

『人民日報』 2003年 1月 21日.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EAI US-China Relations Briefing No. 1, 5, 4, 2011.

김태현, “탈냉전기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외교: 개념, 전략 및 특징.” 『아태연구』 제17권 제2호, 2010.

유동원, “21세기 중국 대외전략과 핵심이익 외교.” 『한중사회과학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20호), 2011.

- 이상국 외, 『미중 소프트 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국방연구원, 2012.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 정책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2013.
- 이창형, “북핵과 중국의 핵심이익.” 『동북아안보정세분석』, 국방연구원, 2013. 8. 7.
- SERI, 『SERI 한반도 경제보고서』, SERI, 2012년 2/4분기.
- 차창훈, “신형대국관계와 핵심이익.” 『국민일보』 2013년 9월 15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562438&cp=nv> (검색일: 2013. 9. 25).
- Cambell, Caitlin, Meick, Ethan, and Craig Murray, “China’s ‘Core Interests’ and the East China Sea.”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Commission Staff Research Backgrounder*, May 10, 2013.
- Iain Johnston, Alastair,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34: 7, Spring 2013. <http://www.nytimes.com/2010/04/24/world/asia/24navy.html?pagewanted=all>; (검색일: 2013. 9. 25).
- Kim, Heungkyu,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XII, No. 1, Spring 2010.
- Kleine–Ahlbrandt, Stephanie (contributor), “Does Promoting ‘Core Interests’ Do China More Harm than Good?” *ChinaFile Conversation*, May 2, 2013. <http://www.chinafile.com/does-promoting-core-interests-do-china-more-harm-good>. (검색일: 2013. 9. 25).
- Kyodo (Tokyo), “China Says Senkaku Islands are its ‘Core Interest.’” April 26, 2013.
- O’Rourke, Ronald, Maritime Territorial and Exclusive Economic Zone (EEZ) Disputes Involving China: Issue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pril 9, 2013), <http://www.fas.org/sgp/crs/row/R42784.pdf> (검색일: 2013. 9. 25).
- Swaine, Michael,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February 22, 2011), <http://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article/67966> (검색일: 2013. 9. 25).
-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U.S.–China Joint Statement.” November 17, 2009.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us-china-joint-statement> (검색일: 2013. 9. 25).
- Wong, Edward, “Chinese Military Seeks to Extend Its Naval Power.” *New York Times*, April 23, 2010.
- Yoimuri Shimbun (Tokyo), “Editorial: China’s ‘core interests’ comment over Senkaku Islands uncalled for.” April 29, 2013, <http://the-japan-news.com/news/article/0000173671> (검색일: 2013. 9. 25).
- <http://m2.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0054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54004.html> (검색일: 2013. 9. 25).
-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716403.shtml](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716403.shtml) (검색일: 2013. 9. 25).
-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572909.shtml](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572909.shtml) (검색일: 2013. 9. 25).
- <http://belfercenter.ksg.harvard.edu/files/amernatinter.pdf> (검색일: 2013. 9. 25).
- [https://dnnpro.outer.jhuapl.edu/media/RethinkingSeminars/021810/Allison\\_ppt.pdf](https://dnnpro.outer.jhuapl.edu/media/RethinkingSeminars/021810/Allison_ppt.pdf) (검색일: 2013. 9. 25).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um=585980&sid=E&tid=3> (검색일: 2011. 10. 8).
- <http://onbao.com/news.php?mode=view&num=38513> (검색일: 2013. 9. 25).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rioo&logNo=90145050435>. (검색일: 2013. 9. 25).

ABSTRACT

Study on China's Core Interests

Kim, Heung-Kyu(Sungshin Women's University)

China's 'core interests' was paid attention in 2009 when Dai Bingguo, China's then-State Councilor, referred it at the first U.S.-China Strategic and Economy Dialogue held in July, 2009. Since then, various debates on 'China's core interests' have been erupted.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defined in 2011 the concept of 'core interests' in its white paper titled in 'China's Peaceful Rise' as follows: national sovereignty,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national unification, stability of political and social system, and consistent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According to the definition, either North Korea or Korean peninsula doesn't likely belong to the range of China's core interests. It is rather strategically important area, affecting China's core interests.

Chinese new leadership headed by Xi Jinping emphasize protection of its cor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owever, the concept itself hasn't yet been well defined. It is vague and evolving. State-centric interpretation of it become more popular and the range of concept extending.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likely illustrates the nature of Xi's foreign policy in the next decade and requires special attention.

Keywords : Core interests, Xi Jinping, China's Diplomacy, Vital interests

투고일: 2013년 10월 30일, 심사일: 2013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1일